

Ⅲ. 주요 경제 현안

1. 3월 위기설

- (현황) 각종 금융지표의 불안정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하여 '제2의 換亂' 또는 '3월 위기설'이 국내외에 대두됨
- (배경)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과 기업의 연쇄부도라는 배경에 더하여 일본계 은행의 결산, 기업의 현지 금융 만기 도래, 원자재 구입난, 인도네시아의 실질적인 모라토리엄,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
- (파급효과) 한국의 3월 위기설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해외의 한국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
- (평가 및 대응 방안) 현재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조정이 진행 중이며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기, 대통령 당선자의 위기 극복 의지 천명 등으로 위기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함

- (현황) 현재 단기 외채를 중장기로 전환하기 위한 개별 은행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, 각종 금융지표의 불안정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하여 '제2의 換亂' 또는 '3월 위기설'이 국내외에 대두됨

- 달러당 원화 환율도 주초에는 1,700원 이상으로 상승하고, 주가도 471.73(17일)까지 하락, 금리도 21%대(회사채수익률)를 유지하여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
- 한편 사채시장에서는 하루 1%의 초고금리까지 등장하는 등 자금 경색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
- '3월 위기설'의 구성: '3월 위기설'이 현실화될 경우 환율 2,000원 수준 육박, 금리 25% 수준 이상, 어음부도를 15% 수준, 실직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 발생(시위, 범죄 등)이 예상됨

- (배경)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과 기업의 연쇄부도라는 배경에 더하여 시기적으로 악재가 3월 중에 중첩되어 나타날 것 예상되기 때문임

- 정부의 금융 개입(협조 용자, CP 만기 연장 등)으로 인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조기 퇴출이 무산된채 금융권은 물론 실물 부문까지 집단 부실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
-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고금리 현상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음
- 12월중 어음부도율은 1.49%를 기록하여 전월(0.38%)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, 98년 1/4분기에도 이러한 기업 부도 확산 추이는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

- 회사채수익률과 콜금리와와의 수익률 격차가 커짐(97년 10월 1.03%p→98년 1월 4.77%p)으로써, 금리의 하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- 그밖에 일본계 은행의 결산, 기업의 현지 금융 만기 도래, 원자재 구입난, 인도네시아의 실질적인 모라토리엄,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
- 일본계 은행들이 3월말 결산을 앞두고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우려됨
- 97년 말 기준으로 기업의 해외 외채 873억 달러 가운데 현지 금융 외채 규모가 45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, 외채 상환일이 3월말에 집중돼 있음(조선일보 2월 6일)
- 금융기관들의 외채도 98년 1월 중 만기연장률이 70~80%에 달했지만, 연장기간은 1~3개월에 불과해 이들의 만기가 3월중에 다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
- 달러고에 의한 원자재 구입난이 3월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- 3월부터 기업의 임금 삭감, 정리 해고 등 일련의 구조 조정 작업이 본격화됨

○ (확급 효과) 한국의 3월 위기설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외국의 한국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

- 상당수의 국내 대기업들이 협조 용자로 연명하는 등 도산 위기가 높아져서, 일본 금융기관들이 채권 회수에 나서고 있음
- 이에 따라 현지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본사가 조달한 외환을 공급받아 채무변제를 하는 상황이어서 현지 법인의 자금난이 한국 모기업에 다시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

○ (평가 및 대응 방안)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조정이 진행 중이며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기, 대통령 당선자의 위기 극복 의지 천명 등으로 위기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함

-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치를 '투자 적격' 직전 등급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시킴
- 현재 외국인 투자자금은 환율 안정 시기를 기다리면서 대기중인 상태이므로 금리의 안정과 해외 지원자금의 원활한 도입을 통한 환율 안정이 필요함
- 아울러 장기외자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(외국인 투자 유치 등)과 수출 애로의 해소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외화 조달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
-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증가가 사회적 동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종 실업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함

(조 흥 래 hrjo@hri.co.kr)